

## OECD 국가 사회보장정책의 새로운 동향



李鐘尹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최

근 OECD 국가는 고실업률의 지속 및 인구의 고령화, 가족의 해체 등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와 도전을 맞고 있으나 사회보장재정의 부담능력 한계로 정부의 대처능력이 약화되어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은 물론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여부마저도 크게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들 문제들에 대해 대처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21세기 사회정책의 구상에 있어서 핵심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공통의 관심과 고민을 가진 OECD 각국의 사회정책장관들이 금년 6월 23~24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 모여 사회경제적 도전들에 대한 포괄적 질서의 확보방안에 대해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다지는 사회정책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금번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 및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조정은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빈곤, 불평등 및 소외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지향적 사회정책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였다. 즉, 아동의 조기개발을 증진하고, 가정에서 일자리에 나가 일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을



최근 OECD국가들은 사회경제적 위기와 도전을 맞고 있으나  
사회보장재정의 부담능력 한계로 정부의 대처능력이 약화되어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은 물론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여부마저도 크게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다하는 것 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친화적 정책들을 촉진하고, 무직 부모들의 고용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아동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출발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셋째,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더 중점을 두고, 건강상태의 불평등 해소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인구층을 더욱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eing)'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나이가 들더라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능케 하는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혁이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보건 및 사회제도의 역할조정을 통하여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적절하고 통합적인 케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중앙, 지방),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 및 지역사회간에 권리와 책임, 기회를 적절히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과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사회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의 OECD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선진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고실업과 인구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기능의 약화 등 보편적인 사회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이 또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지구촌화에 따

른 경쟁체제에 대한 적응의 실패로 IMF 관리체제를 맞이함으로써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의한 노인부양 부담과 비용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意識의 약화 현상 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더욱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우리에게 밀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활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책으로서 미비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국가경영전략의 틀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때에 OECD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변화 및 개혁의 동향과 국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조류를 참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동일한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함으로써 국가적 단위의 실험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실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주마가편(走馬加鞭)하고,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OECD국가들의 사회보장 동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